참사 정쟁화 빌미 '이태원 특별법' 안된다는 국힘

여야 행안위 전체회의서 공방

민주 "곡기 끊은 유가족 한 풀어줘야"

행안부 차관 "제정 필요성 크지 않아"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 당론 채택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든다"며 "법안 내용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 태도에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생해 사고 원인부터 구조 논란까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의 조사위원회 구성부터가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조사위원회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주면서 무소불위가 되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향해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하겠다고 공언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두고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합의대로 현재 이 의원이 맡고 있는 2소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여야 합의 처리를 공언하지 않으면 2소위원장을 교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태원 특별법은 2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며 이태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여당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입법에 동참하고, 혹시 의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원통해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수감 중인 분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유가족의 속이 문드러진다고 한다"며 "유족들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의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유족들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는 것이 행안위와 국회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최소한 언제 이후 표결하자는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옹호했다.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대표, 국힘 의원들과 내달 10일 방미

5박7일…"한미동맹 발전 논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달 10~15일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두 달 반만이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석기 의원,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 의원들과 5박7일 방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할 계획으로, 미국 조야 인사들과 한미관계 를 논의하고 재외동포 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미 취지에 대해 "여당 당대표가 가장 중요한 혈맹국인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의회 및 정관계 지도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미국 내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김 대표는 그간 소원해진 한미 의회외교를 이번 방미를 계기로 정상화하고, '워싱턴 선언' 등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미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이후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대비돼 주목된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12~15일 중국을 방문했고, 같은 당 도종환 의원 등 7명도 지난 15~18일 문화교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다만, 김 대표는 "방미 일정은 벌써 한참 전에 잡고 조율 중이었다"며 "민주당의 중국 방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방미 출장경비는 국회 예산이나 미국 측 지원금 없이 당비로 충당한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베트남 도착…동포 간담회·문화교류의 밤 행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박 3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하이 국가주석실 장관, 타잉 하노이인민위원장, 뚱 주한베트남대사, 부 외교부 수석차관, 중 외교부 의전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한국 측에서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장은숙 하노이한인회장, 홍선 한인상공인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환영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의장대를 사열한 뒤 공항을 떠났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 여사는 아이보리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 김 여사는 앞선 프랑스 방문 때 들었던 부산엑스포 홍보 키링(열쇠고리)이 달린 파란색 손가방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동포를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하고 한국어 교육기관을 방문했다.

또 K산업 쇼케이스 및 무역상담회, K푸드 박람회 등을 둘러보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제품을 살펴보고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과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은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초청에 따른 것으로, 양자 차원의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방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36%…2주만에 1%P 상승

NBS…국힘 35%·민주 25%

총선, 정부 지지·견제 '팽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4%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보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9%로 가장 높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움'(8%),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8%)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임'(18%),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18%),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3%)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직전 조사보다 4%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1%p 내린 25%였다. 직전 조사에서 5%p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10%p로 벌어졌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을 묻는 데는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44%)과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43%)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